

12.3 친위쿠데타와 한국 사회의 과제



전 우 용

1. 계엄령이란?

Martial law ; 점령지 '통치권' 전체를 군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것

점령지의 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군법 시행 체계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는 1791년 프랑스혁명 때가 최초 = 근대적 계엄령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계엄' 규정

1899. '대한민국헌법'에 포함.

제5조.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서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하시나니라.

1882. 일본제국헌법 제14조.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대한제국 황제는 물론 식민지 조선총독도 '계엄령'을 선포한 적 없음.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자체가 '계엄 체제'에 해당.

일본의 관점에서 '식민지'는 점령지이며 '식민지 원주민'은 포로에 상당.

2. 해방 이후 한국의 계엄령

1948. 여수 순천 계엄령 / 제주도 계엄령

제헌헌법 64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계엄령 준용

1950. 전국 비상계엄

한국전쟁

1952. 부산 계엄령

최초의 친위 쿠데타. 부산정치파동

1960. 비상계엄. 4.19. 계엄군 발포 거부.

1960. 6.15. 헌법 개정

제64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해방 이후 한국의 계엄령

1961.5.16. 비상계엄

1.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2. 수하(誰何)를 물론하고 국외여행을 금한다.
3.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치안확보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본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통신의 전제도 이에 준한다.
4. 일체의 보복행위를 불허한다.
5.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한다.
7.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1963.12.27. 헌법 개정

제75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유지

2. 해방 이후 한국의 계엄령

1964.6.3. 비상계엄 / 6.3사태

1972.10.17. 비상계엄 / 10월 유신. 제2차 친위쿠데타

1979.10.18. 비상계엄 / 부마항쟁

1979.10.27. 비상계엄 / 10.26.

198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2024.12.3. 비상계엄 / 3차 친위쿠데타

3. 외국의 계엄령과 '더러운 전쟁'

1973.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와 계엄령

1976. 아르헨티나 비델라 쿠데타와 계엄령

2013. 이집트 엘시시 쿠데타와 계엄령

계엄령 ; '전시형 인간성' = '인간 내면의 악마성'을 끌어내는 행위

인간의 모든 '미덕'은 평화시를 기준으로 구성.

전시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등이 훈장감.

계엄령은 자국민 전체 또는 일부를 상대하는 '전쟁'이자 자국민 전체 또는 일부를 '포로' 취급하는 행위

윤석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중북 반국가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야당 의원과 당원,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전농 회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 참가자,
윤석열 김건희 비난 댓글 작성자...

4. 12.3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배경

Democracy 대 Autocracy / Aristocracy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논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일을 삼가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인**을 아껴야 한다. **민**을 부림에는 때를 맞춰야 한다.”

人 = 지배자, 전문가, 교양인, 지식인, **왕에 속한 사람**

民 = 피지배자, 무식자, 노동자, **땅에 속한 사람**



4. 12.3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배경

Democracy 대 Autocracy / Aristocracy

Democracy	Autocracy / Aristocracy
1884. 일본 번역어 ‘민주주의’ 도입(한성순보)	조선왕국 – 대한제국 – 대일본제국
1898. 만민공동회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항만년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대한국 국제 제2조)
1907. 신민회(新民會)	
1919. 대한민국(大韓民國)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현인신(現人神)인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체제가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
“이천만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일체 평등함”(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	

4. 12.3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배경

Democracy 대 Autocracy / Aristocracy

Democracy	Autocracy / Aristocracy
1945.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1948. 대한민국 헌법 제정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 1960. 4.19 - 1953 의무교육 실시와 일시적 '민주주의' 교육	천황은 사라졌으나 해방, 분단, 전쟁을 거치며 군국주의 체제, 사상, 문화는 온존. 천황제 군국주의 하에서 기득권을 누린 세력이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체제 구축. 4.3 학살, 국민보도연맹 학살, 거창 등지 양민학살, 1952 친위쿠데타와 부산정치파동... 1961. 5.16.

4. 12.3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배경

Democracy 대 Autocracy / Aristocracy

Democracy	Autocracy / Aristocracy
1970. 전태일 분신 - '민중' 개념 소생. 1974.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출범 1979. 부마항쟁 / 10.26. 1980. 광주항쟁 1985. 구로동맹파업 1986. 5.3. 인천항쟁 1987. 6월항쟁	1972.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비상계엄 1974. 긴급조치 1호 - 1975. 긴급조치 9호 1979. 비상계엄 / 12.12 쿠데타 1980. 5.17 내란 / 군부독재체제 재구축 1987. 노태우 당선 / 군부독재정권 연장

5. 12.3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의미

- 1987년 6공 헌법은 독립운동 / 민주국가 수립운동 세력 대 친일 매국 /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세력 사이의 '휴전협정'
- 1990. 3당합당;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세력이 '보수세력'으로 분식.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세력 우위의 정치 지형 형성.
- 1998-2007. 김대중-노무현 정권;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착각
- 2008-2017. 이명박-박근혜 정권; 용산참사, 세월호참사, 민간인 사찰, 환경파괴...
 -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체제의 재현
 - 2016. 20대 총선; 공화파 126 대 왕당파 160, 무소속 11.
- 2017-2022.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구호. 코로나 19. 반민주 권력기관 개혁 실패.
 - 2020. 21대 총선; 공화파 189 대 왕당파 106, 무소속 5.
- 2022. 윤석열 당선
 - 2024. 22대 총선; 공화파 189 대 왕당파 111.
- 12.3. 친위쿠데타; 지지층의 축소 경향에 초조감을 느낀 '극렬 왕당파'의 유사왕정 복원 시도
 - 1987 '휴전협정' 파기, 선제 공격
-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 계엄군 병사들의 소극성으로 친위 쿠데타 실패
 - "과거가 현재를 돕다"

6. 민주화운동 주체(공화파)의 변화

- 3.1운동; 학생, 종교인 중심
 - 학교와 교회 말고는 합법적 조직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
- 1920-30년대 노동, 농민, 청년, 여성운동 단체 출현
- 분단, 전쟁을 거치며 '생활인'의 정치, 사회운동 소멸.
- 4.19를 계기로 학생, 종교인 중심 운동 재개
- 1970년대 '민중운동'; 가농, JOC,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
-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계기로 '생활인'의 정치, 사회운동 부활
- 1987. 6월 항쟁 이후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민중단체'와 경실련, 환경연, 여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결성
- 1996. '연세대 사태' 이후 학생운동 급속한 쇠락.

6. 민주화운동 주체(공화파)의 변화

- 2004. 노무현 탄핵과 '4대 개혁입법' 추진
 -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기본법
 - 反 노무현 세력 총결집 = 뉴라이트
- 이명박 정권기 뉴라이트 담론 확산
 -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 일베 등 패륜적 온라인 커뮤니티 육성, 지원
 - '인간성의 최저선' 추락
- '정치적 학생운동' 쇠락 이후 대학 내 '신 진보' 담론 확산
 - 페미니즘, PC주의, 환경생태주의...
- 이라크 파병 반대, 노무현 탄핵 반대, 효순·미선 추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4대강 사업 반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국정원 여론조작 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탄핵 촉구 등 대규모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나 청년 세대 참여는 경향적 감소
- 2019 각 대학 조국 규탄 집회
- 2024 윤석열 탄핵 운동에서 청년층이 다시 부상.
- 1990년대 중후반 단절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세대간 연계' 복원 계기
 - 비조직적이며 느슨한 조직적 연대.
 - PC주의와 뉴라이트의 적대적 공존.

7. 내란 진압과 한국 사회의 과제

- 내란, 확실히 진압할 수 있을까?
 - 1987년의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 과제
 -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세력이 '기득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종전' 가능성은 희박
 -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내란 선전 선동 집단 전면 색출, 처벌 불가능
 - 2024.8.11-12. 국방장관,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원장 신규 지명
 - 반민주 유사왕정 독재세력의 영역이 조금 줄어든 또 다른 '휴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 한국 사회의 과제
 - 반민주 독재세력 약화
 - 검찰 등 권력기구 개혁
 - 유사왕정 복고주의 청산
 - 반독재 민주세력 확장, 강화
 - 생활 밀착형 시민사회운동의 기반 확충
 - 뉴라이트 담론 비판과 대안 제시